



‘개발 호재’ 무안 빨흙 불법 성토 농지 ‘투기 의혹’ 증폭

인접 강변도로 개설 공사로 접근성 ↑·영산강 조망권
불법 적발 시점 6년 이내 매입·분할 비중 68% 달해
외지인 소유 수두룩...농가주택 건설 농지→대지 변경
농가주택 건축 당시 규격 초과 관로 설치 특혜 제공

〈속보〉택지개발지구인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 인근 농지에서 이뤄진 대규모 ‘빨흙 불법 성토’(본보 5월21일·5월27일·5월29일자·6월5일자 1면)와 관련, 토지 소유주들이 실제 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토지 매입이 불법 성토 적발 6년 이내에 이뤄진 데다, 인접 도로에 영산강변도로 개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접근성과 영산강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빨흙 성토 적발 직전 허허벌판이던 인근 농지에 농가주택들도 잇따라 건축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을 키우고 있다.

17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총 38필지(8.8ha)에 빨흙 불법 성토가 이뤄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 농지는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단지, 근린시설 등과 2km 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불법 성토로 인해 농지의 높이는 성인남성 키를 웃돌 정도로 높아졌다. 무안군이 불법 성토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

리기 전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도 4필지의 높이는 2.5m, 2.2m, 2m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농지와 관련,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동산 개발 계획은 없다.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빨흙 성토가 이뤄진 38필지 중 26필지(68%)를 기점으로 6년(2017-2023년) 사이 매매·분할이 이뤄진 필지가 26곳(68%)에 달했다.

농지 소유주 중 타 지역 거주자가 적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개인 소유주 중 ▲경기 용인·군포시, 전남 영암군 거주자가 각 1필지 ▲광주시 거주자 2필지 ▲목포 거주자 13필지씩을 소유하고 있다. 무안 거주자의 소유 농지는 17필지다.

공동 소유주의 경우에도 영암·목포·무안 거주자 1필지, 목포·광주 거주자 1필지, 광주·무안 거주자 1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지는 성토 이후 지대가 높아지면서 농가주택 건축 시 영산강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유지 도로를



빨흙 불법 성토 농지 일원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 인근 농지에서 이뤄진 빨흙 불법 성토와 관련, 해당 농지의 토지주들이 실제 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빨흙 불법 성토 농지 일대. (광주매일신문 DB)

접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문제도 없는 곳이다. 특히 우량 농지 조성사업 개발 행위를 낸 5필지의 경우 모두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영산강변도로와 맞닿은 접도구역이다. 나머지 농지도 대부분 강변도로 일대다.

빨흙을 불법 성토한 토지 소유주 중 일부는 2020-2021년 사이 총 3채의 농가주택을 건축했다. 농지에 농가주택을 건설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불법 성토가 이뤄진 농지들이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향후 택지 개발, 도로 신설 이후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한 빨흙 성토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준공된 농가주택에 규격 이상의 관경(관의 직경)으로 상수관로

가 설치된 점도 투기성 개발 의혹에 힘을 실고 있다.

실제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는 2020년 6월8일과 2021년 11월23일 건축 신고가 접수된 일로읍 망월리 933-1번지와 946번지 일대에 군비 총 2천361만4천430원(각 903만4천원, 1천458만430원)을 들여 310mm(관경 40mm), 325mm(관경 50mm) 길이의 상수관로를 매설했다.

상수관망과 수압, 인구수 등의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무안군의 경우 집이 한 채만 있을 경우 통상 관경 20-25mm의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있다. 가정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규격 20mm 지관 기준 관경 40mm는 8배, 50mm는 16배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설명이다. 즉, 농가주택 수를 감안했을 때 과다 규격의 상수관로가 설치된 셈이다.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도 “당시 사업을 승인해준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한 정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미 필지들이 분할돼 있었다는 점에서 농지 개발 행위를 염두에 두고 토지주들이 기준보다 큰 관경의 상수관로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법 성토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은 “어머니한테 상속 받은 땅이 오룡지구 개발 과정에서 편입돼 나온 토지 보상금으로 형제들과 함께 근방에 농지를 매입한 것 뿐”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양시원·무안=김성호기자

‘의대 설립 대학 추천 전남도 공모’에 힘 싣는 정부

조규홍 장관 국회 상임위서 “도 용역 결과 최우선 검토”

이주호 장관 “대통령 말씀사안 교육부·복지부 계속 협의”

정부가 최근 전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대학 추천을 위한 공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남도에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국립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부처 장관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공모의 당위성도 확보되는 모양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

복지위원회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전남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남도의 요청을 정부에서는 수용할 예정이냐”고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용역 결과 후 전남도에서 건의하는 내

용을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만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남지사가 책임있게 처리하고 또 정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선배정을 해줄 필요는 없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배정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청문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통해 배정, 학교, 규모를 요청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 (의대 정원) 정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 2026년 (전남권) 의대 신설이 돼야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그렇다.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1일 서미화 의원의 면담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정기자

Today

- 인터뷰·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5면
- 푸드탐방·무등산권역 로컬음식 9면
- 빛고을아트선, 새도약을 꿈꾸다 14면

자연과 공존하는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라마다프라자호텔 & 씨원리조트 자은도

개장 2주년 기념

SO COOOOOL~

PKG 특가 이벤트

판매기간 ~7/23
투숙기간 ~9/3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ww.class-one.co.kr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길 163-101